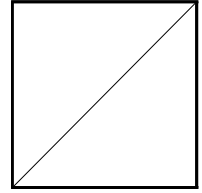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44 호
의 결 연 월 일	2020. 1. 15. (제 1 차)

의
결
사
항

농협자산관리회사에 대한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 원 장 은 성 수
제출 연월일	2020. 1. 15.

1. 의결주문

농협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1>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농협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·시행 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(붙임1)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(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)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2조(과태료)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
(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)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
(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)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4] ‘과태료의
부과기준’
- 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 제20조(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)
- 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 [별표3] ‘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
마련기준’(제20조 관련)
-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(과징금 및 과태료의
부과) 및 [별표3] ‘과태료 부과기준’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(붙임2)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 심의필(2019. 12. 12.)

<별지1>

농협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☐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

- 과태료 금액 : 농협자산관리회사 2,400만원
- 부과사유 :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
보안대책 수립·시행 위반
- 법적근거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52조,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, 제38조
및 [별표4] ‘과태료의 부과기준’,
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 제20조 및 [별표3] ‘기술적·물리적·
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’,
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(과징금 및
과태료의 부과) 및 [별표3] ‘과태료 부과기준’

2. 조치사유

가.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
수립·시행 위반

☐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동법 시행령

제16조 및 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제20조 및 [별표3]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 등에 대해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데도,

농협자산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·관리적 보안대책 수립·시행 의무를 위반하였음

(1) 개인신용정보 출력·조회(활용)에 대한 통제 부실

① 개인신용정보 출력 시 용도 특정 불이행

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,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도,

2018.5.2. ~ 2019.5.14. 기간중 채권관리시스템에서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총 5,929건의 채무자정보를 출력*하였음

* 채권관리시스템의 ‘자유출력’ 기능으로 채무자정보를 출력할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출력(인쇄, 화면표시, 파일생성 등) 가능

② 개인신용정보의 조회(활용) 시 일부 항목의 기록 누락

개인신용정보를 조회(활용)하는 경우 조회자 신원, 조회일시, 대상정보, 목적,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는데도,

2018.5.3. ~ 2019.5.14. 기간중 채권관리시스템에서 총 9,481,998건의 채무자정보를 조회(활용)하면서 목적 및 용도를 기록하지 않았음

(2)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점검 미 실시

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,

2014.10.22. ~ 2019.5.14. 기간중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

(3)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의 차등 부여 불이행, 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신용정보의 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·개선 소홀

회사는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으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고, 임직원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신용정보의 관리·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·개선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,

2014.10.22. ~ 2019.5.14. 기간중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인사업무담당 직원 등 총 24명*에게 채무자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조회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았고,

* 인사, 총무, 기획, 회계 업무담당 직원 등

상기 사실 (1)~(2)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신용정보의 관리·보호실태에 대한 조사·개선을 수행하지 않았음

(붙임1)

관계법규 등

□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

제19조(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)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(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, 입력된 정보의 변경·훼손 및 파괴,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제19조를 위반한 자

□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6조(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.

1.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2.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·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
3. 신용정보 취급·조회 권한을 직급별·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38조(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<별표4>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8조 관련)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파.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3호	4,000

□ 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

제20조(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)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<별표 3>과 같다.

<별표 3>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(제20조 관련)

I. 목 적

이 기준은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 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II. 기술적·물리적 보안대책

5. 출력·복사시 보호조치

-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 용도를 특정하여야 함
- ② 개인신용정보를 조회(활용)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, 조회일시, 대상정보, 목적,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

III. 관리적 보안대책

1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

- ①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함
- 2. 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폐기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- 6.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

2.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

- ①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·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
-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,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함
- 2.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

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<별표3>

과태료 부과기준

3. 예정금액의 산정
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위반결과 \ 동기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중 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
- (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- (3) 경 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피해가

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
없는 경우 등을 의미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
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- 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
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
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- 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4.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

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
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
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.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
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, 나목(5), (6) 및 (9)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
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.

6. 기 타

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.

(붙임2)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농협자산관리회사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. 2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과태료 2,400만원 부과
임 직 원	견책 1명, 주의 9명, 주의상당 1명, 퇴직자위법 사실 통지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위임직채권추심인 미등록 및 부당한 채권 추심

□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,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,

채권관리본부 본부장 ○○○는 2017.3.1. ~ 2018.2.28. 기간중 외부 인력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◇◇◇ 등 20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채권을 추심토록 하여 총 4,656건, 29억5천9백만원을 회수하였음

< 관계법규 >

1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7조

나.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·시행 의무 위반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제20조 및 [별표3]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 등에 대해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데도,

농협자산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·관리적 보안대책 수립·시행 의무를 위반하였음

(1) 개인신용정보 출력·조회(활용)에 대한 통제 부실

① 개인신용정보 출력 시 용도 특정 불이행

채권추심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,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도,

2018.5.2.~2019.5.14. 기간중 채권관리시스템에서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총 5,929건의 채무자정보를 출력*하였음

* 채권관리시스템의 '자유출력' 기능으로 채무자정보를 출력할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출력(인쇄, 화면표시, 파일생성 등) 가능

② 개인신용정보의 조회(활용) 시 일부 항목의 기록 누락

채권추심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조회(활용)하는 경우 조회자 신원, 조회일시, 대상정보, 목적,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는데도,

2018.5.3.~2019.5.14. 기간중 채권관리시스템에서 총 9,481,998건의 채무자정보를 조회(활용)하면서 목적 및 용도를 기록하지 않았음

(2)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점검 미 실시

채권추심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,

2014.10.22.~2019.5.14. 기간중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

(3)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의 차등 부여 불이행, 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신용정보의 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·개선 소홀

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고, 임직원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신용정보의 관리·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·개선을 하여야 하는데도,

2014.10.22. ~ 2019.5.14. 기간중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인사업무담당 직원 등 총 24명*에게 채무자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조회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았고,

* 인사, 총무, 기획, 회계 업무담당 직원 등

상기 사실 (1)~(2)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
직원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신용정보의
관리·보호실태에 대한 조사·개선을 수행하지 않았음

< 관계법규 >

1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
3. 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 제20조 및 <별표3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금융 데이터 정책 과	신용 정보 평가 실
연 락 처	02-2100-2697	02-3145-7842